

대학평가의 제문제

구 병 립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도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대학평가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교협의 평가가 합법적 공신력을 갖고, 대학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고,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의 적극적·자발적 참여가 수반되어야 하며, 대학 서열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기시해야 하고, 평가결과를 재정 지원의 기준으로 삼는 차원낮은 활용을 삼가해야 할 것이다.

1. 첫머리에

세계적으로 대학교육은 금세기의 종반을 맞이하면서 세기말적인 긴장과 내·외부적 도전 속에서 엄청난 변혁을 겪으면서, 대학교육사 10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랫동안 일부 상층 계급의 전유처럼 여겨지던 대학이 숭한 시대적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는 대중에게 개방되는 과정에 있다. 엘리트 중심의 폐쇄적인 상아탑을 계승해온 현대의 대학은 계속 그 조직과 규모 그리고 기능이 확충 복잡해지면서 (Miniversity → Communi-

versity → University → Multiversity → Glovercity) 이제는 복합적 목적과 다양한 기능을 지닌 평생교육 기관으로 변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날 아카데미즘의 본산이었던 대학이 이제는 직업교육의 터전으로 변신하고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슈퍼마켓'이 되어 만인에게 그 문호가 개방될 것이라는 전망(Boyer E., 1987)은 대학의 본질이나 성격 및 그 속성을 재해석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그 동안에도 Clark Kerr의 Multiversity(多機能·多目的大學)로서의 개념화나 Martin Trow의 대학인구 확충 모형, 그리고 David Ries-

man의 학생소비자시대의 전망 등은 모두 20세기 하반기의 대학 변화와 교육 개혁에 관한 추적인 동시에 미래 전망적 시사를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대학 발전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정치·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18세기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경제·사회적인 실질적 민주주의로 성숙해가면서 이제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그 동안의 수직적 사회 지배체제가 퇴색하고 수평적 상호통제나 상호적 가치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근간에는 나라마다 '주민자치', '고객만족', '수요자 위주' 및 '소비자 중심'이란 새로운 가치관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위와 같은 대학 내·외부의 변화로 인해 오랫동안 엄격한 계율과 권위의 상징인 채, 치외법권을 누리면서 세속을 외면하고 '고독한 사색과 자유로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전통 대학이 대중 교육기관으로 변모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당위이며 사회발전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들이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그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무성이 강조되어 대학은 이제 사회적 공익 기관으로서의 체제분석이나 비용 효과분석의 대상으로 등장되었다. 더욱이 금세기 중반 교육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교육재정학, 교육경제학)이 강화되면서 비단 대학교육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서비스와 생산성,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교육의 질과 양, 교육시장과 학생유인체제 등과 같은 경제성 짙은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였다.

위와 같은 대학교육의 변화 추세 속에서 모든 나라의 대학들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대처한 갖가지 방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

고 효과적인 것이 대학간의 협동체제나 대학평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평가는 오랜 세월 미국이 선도해 오다가 지금은 많은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대학간의 자율통제를 위한 기제로서 대학 발전의 요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면 관계로 대학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이나 세계 각국의 대학평가 체제에 대한 설명은 이 글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인정제 개관

1) 개념적 정의와 그 성격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평가라는 용어가 너무 남용되어 큰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본다. 정부(교육부)의 각종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재정지원을 위한 자료수집은 물론 일부 언론사나 임의 단체들의 대학관련 자료 작성들이 대학평가로 통칭되어 한국대학교육협회의 법정적 평가기능을 교란시키는 갖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대학평가는 원래 비정부적 사업이어야 하며, 대학사회에서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자발적 상호통제체제라는 오랜 전통, 그리고 대학은 평가를 통해 서열화할 수 없다는(Young K. E., 1983) 입장에서, 위와 같은 의사(擬似) 활동들은 대학평가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분명 대학의 성격이나 평가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개념의 오용임이 확실하다.

나라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평가나 평가인정제는 평가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대학들의 평가 요청이 전제되어야 하며 대학평가를 주관할 수 있는 합법적 기관(대교협법 제18조)이 사전에 제시한 기준이나 척도에 따라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학

의 자체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1년 동안에 걸친 자체평가결과가 보고서로 제출되면 동료집단 내에서 선발된 평가위원들이 먼저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지정된 시기에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 점검하는 현지방문평가가 상당한 시간(약 3일간) 동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결과가 종합 집계되면,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심의 판정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대학평가 인정위원회)에서 대학 또는 학과별로 인정(pass), 불인정(nonpass) 및 인정보류(probation)로 구분되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인정보류의 경우 1~2년 후에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판정결과는 해당 대학의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사회에 공개되고 관련 기관에 통보되며, 평가위원들은 각 대학별 보고서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평가대학에 환류시켜야 한다. 따라서 대학평가는 한 번의 평가에 약 3년간이 소요되며 위와 같은 과정은 세계 모든 나라의 대학평가의 일반적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생략된 어떤 행위도 대학평가라고 명명할 수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부터 실험대학 선정을 위한 당시 문교부 주관의 대학평가적 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의 대학평가로 볼 수 없다. 그 후 1982년 창설된 대교협의 법정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대교협에서는 초기 10년 동안은 각 대학의 신청을 받아 5년 주기로 장학적 의미의 평가를 기관평가와 학문 영역별로 실시해 왔다. 그 후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회의 건의에 따라 학과평가는 1992년부터, 대학종합평가는 1994년부터 평가인정제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대학평가의 성격

대학평가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고등교육의 메카로까지 불리는 미국이 일찍부터 선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1787년 뉴욕 주에서 주립대학들의 효율성 검진을 위해 대학별 평가가 시도된 이래(Birch, 1979) 미국 각 주에 보급(아이오와 1846, 유타 1896, 워싱턴 1909, 버지니아 1912, 메릴랜드 1914)되었으며 프로그램 평가 역시 1847년의 의학협회(AMA)의 의대 평가, 1900년 변호사협회(B.A)의 법대 평가가 효시가 되어 각 분야로 확산되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으로 보급되어 각기 나라별로 체질에 맞는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미국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서 대학평가가 지향하는 공통적인 목적이나 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학평가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학사회의 자율통제를 위한 기제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교육의 지고한 전통이며 대학은 지원 조성하되, 통제의 대상은 될 수 없다는 명제는 널리 공인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들은 일찍부터 갖가지 협회를 만들어 협력하고 상호통제하는 자율 통제 기법과 수준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대학의 운영 합리화와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실한 대학 때문에 대학사회가 함께 규탄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통제하는 방안으로 대학평가가 시도되어 왔다.

둘째, 평가는 대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 되고 있다.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교육의 질과 양이 바로 국력

신장이나 사회발전과 직결되는 현대사회에서, 정부와 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는 대학사회는 연구와 교육의 수월성과 높은 생산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적 기여도 제고를 위한 대학간 협력체제의 하나로 대학평가는 성장해 왔다.

셋째, 현대 대학이 사회 속에서 대학으로서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동료집단으로부터의 주기적 검증과 자극 및 조언을 받는 과정이 바로 평가체제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은 이제 고독과 자유로 상징되는 전통 대학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원천이며 유용한 인재의 산실로 기능하기 위해 국민과 사회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영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측정받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대학평가인 것이다.

넷째, 하나의 교육·연구 기관 또는 한 학과로서의 체제분석적 건강도를 측정하고 이를 치유해 가는 과정이 바로 대학평가와 직결된다. 의도적으로 설립된 한 대학, 한 학과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교육과 연구 체제로서의 장·단점을 점검받아 대학 발전과 학과 발전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부단한 사회변화나 학문 발전 및 직업세계의 변화 속에서 그 대학의 위상과 현황을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해 보는 진단과 처방의 계기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대학평가다.

끝으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동체로서의 공감대와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기관의 통합성을 강화하고 각자의 역할과 직분을 재정립해 주는 장을 마련해 주는 성격이 있

다. 대학의 이념과 목표가 다시 검토되고 각 부서나 모든 조직이 자기점검이나 외부적 평정을 받는 과정에서 평소 소홀히 된 자기정체성이 재무장되는 기회로 활용된다.

그 외에도 대학평가는 대학교육의 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대학 진학자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통계나 모든 자료가 재정리되는 등 행정관리상의 성과도 많다. 따라서 모든 대학들은 평가에 따른 긴장과 부담도 있지만, 대학평가의 높은 유용성이나 성과면에 비중을 두고 무척 바람직한 제도로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 현행 평가인정체제 개요

일반적 대학평가(assessment 또는 evaluation)와 평가인정제(accreditation)는 그 목적이나 과정은 유사하면서도 평가결과의 처리나 판정 및 대외적 공개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직접관할체제로 되어 있는 동양국가에서의 대학인가(법률상으로는 특허) 제도는 미국적 평가인정제를 모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 평가인정된 대학과 인정을 받지 못한 대학이 공존하는 미국적 다양성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적 평가인정제라는 독특한 모델이 정립되어야 하고, 이는 아직도 일본이 대학평가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하다.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가 평가인정제의 채택을 건의하던 무렵 평가를 관장하고 있던 대교협은 평가인정제에 필요한 평가준거와 인정기준의 정립을 위한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이란 방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는 1992년 경주의 전국 대학 총장회의

에서 보고되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각 대학 발전계획의 준거(최저기준)가 되어야 할 연도별 정량지표나 평가방향이 총장들의 합의를 통해 확정된 바 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은 그 후 학과평가와 대학종합평가의 준거가 되어 모든 대학들이 필수적으로 충족시켜, 우리나라 대학들의 후진성을 극복해 가자는 공동결의의 산물이며 각 대학간의 발전지향적 약속으로 볼 수 있다. 그 후 평가인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대교협 이사회와는 별도로 외부 인사 위주의 대학평가인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평가에 관한 관여를 배제하였다.

평가인정위원회는 제1주기의 평가인정 기간을 7년으로 정하고 모든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평가받을 연도를 신청하여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학과평가도 실시 2년 전에 평가분야를 결정하여 각 대학에 통보하며, 그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대학은 의무적으로 평가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선 종합평가인정제의 목적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각 대학의 경영 합리화와 대학 기능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무성을 높이면서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기간을 정하여 회원 대학들이 갖추어야 할 교육조건이나 운영관리의 적정수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대내·외적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각 대학 교육의 질과 양을 보증하고 대학교육의 전반적 수준 향상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다.

평가주기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7년(1994~2000)을 1주기로 하고 있으므로

모든 대학이 동 기간 안에 자율적으로 평가시기를 선택하여 1주기 내에 인정받아야 하며 2주기 이후의 기간과 평가방향은 앞으로 평가인정위원회에서 대학사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심의·결정하게 될 것이다.

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이므로 대교협의 총회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수행을 위한 기획위원회, 매년의 평가추진위원 및 평가단 등은 각 대학에서 참여하는 교수들로서 구성·운영되며 대교협 사무처는 행정적 지원이나 업무추진만을 담당한다.

평가의 절차와 과정은 평가기준과 영역의 제시 - 자체평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위원단 구성 - 서면평가 - 현지방문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피평가기관의 이의 신청과 그 해결 - 평가인정위원회의 심의와 판정 - 결과 발표 - 평가결과의 관련기관(각 대학 및 유관기관) 배포라는 정형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평가의 항목이나 내용은 교육이념과 목표·교육·연구·교수와 학생·시설·행재정 등 6개 영역 100개 항목 30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35%의 정량적 지표와 65%의 정성적 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인정을 위한 판정기준은 대학발전 10개년 계획의 연도별 지표에 따르며, 대개의 경우 매년 4월 1일자로 수집되는 대학 교육 여건조사를 통계처리하여 표준편차의 $+1\sigma$ 이상을 인정기준으로 삼는다.

그 외 학과별 평가도 종합평가와 유사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평가 내용이나 분야만 각 학문 영역별로 달리 구성되고 있으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대학평가와 관련된 제문제

모든 대학들은 그 이념과 목표가 서로 다르고 역사와 전통, 규모와 위치 그리고 학풍이나 환경여건이 서로 다르다. 그 위에 최고 학부로서 높은 수준의 학자나 전문가 집단과 함께 나름대로 사회적 권위와 명예를 인정받고 있다. 다른 한편, 대학의 기관적 특성은 목표의 모호성, 구성원의 다양성, 관심과 이해의 상충, 느슨하고 복잡한 조직 및 결과 측정에 있어서의 난점 등을 든다 (Victor Baldrige & Torrence Deal, 1983). 대학은 이러한 특성으로 자칫하면 보수적 독단이나 방만한 운영으로 기관 관리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결여하여 낭비와 비능률의 장소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대학을 평가하여 그 사회적 신뢰나 책무성을 강화시키면서도 기관의 통합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평가제도는 그 긍정적 측면이나 성과와 함께 많은 위험이나 부작용도 수반하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신중하고 차원 높은 접근이 전제된다. 여기에서 대학평가의 성공적 수행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1) 평가주체와 평가기관에 관한 문제

대학평가는 비정부적인 자발적 사업이란 특성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대학평가의 주체는 바로 대학사회 자신이며 대학사회의 합의와 상호 협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는 4년제 대학의 협동과 그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18조에 우리나라의 대학평가는 대교협에서만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수차례 걸쳐 정부가 직접 대학을 평가하겠다는 주장이나 일부 언론사나 임의 단체의 대학평가 시도는 대학평가의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례임이 분명하다.

2) 대학의 다양성 존중 문제

다음은 대학의 다양성을 수용하여 평가기준이나 척도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다. 대학의 학문지향성과 전문적 직업지향성은 대학교육의 두 개의 지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이를 똑같이 추구할 수는 없으며 그럴 필요성도 없다. 여기에 봉사기능을 첨가하여 대학 특성화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대학평가의 준거는 전국적 공통기준과 함께 반드시 대상 대학의 특수성이나 독자성이 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연구지향적 대학과 교육 중심 대학의 기준이나 평가 준거가 같을 수는 없다. 이를 소홀히 할 때 자칫 대학평가가 대학교육의 획일성을 강화하는 역기능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교협의 평가영역이나 기준 및 척도가 매년 평가대상 대학에 따라 부분적으로 바뀌고 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3) 물량적 측면보다 질이 강조되어야 하는 문제

대학평가는 정량적 측면과 함께 정성적 측면도 강조되어야 한다. 대학교육에서는 물량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활용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의지나 제도 그리고 과정이나 절차와 같은 소프트 웨어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교협의 평가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성적 평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단순한 물량적 규모나 외형적 지표만으로 재정지원의 기준으로 삼거나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있는 행정관서나 일부 언론의 임의적 대학 평정의 폐단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4) 평가과정의 합리화와 피평가대학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문제

자체평가 과정이나 현지방문 및 검증 확인이 없는 대학평가는 있을 수 없다. 대학평가에서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대학 내부에서의 자기진단이나 자체평가 및 오랜 준비과정에서 조성되는 공감대나 일체감 형성이라 할 수 있다. 그 대학은 누구보다 그 대학 구성원이 잘 알고 또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학의 변화와 개혁은 구성원의 참여 없이 성취될 수 없다. 현장 확인이나 대학 당사자들과의 상담이나 의견교환 없이 분장되고 과장된 제출자료나 외부적 정보에만 의존하는 대학평정은 큰 위험 부담과 엄청난 역기능을 수반하게 된다. 대학평가는 평가받는 기관과 외부 평가단의 공동작업이며, 대학에 대한 감독권 행사나 대학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결코 이미 대학평가일 수가 없는 것이다.

5) 금기로 되어 있는 대학 서열화 문제

평가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는 불가능하고 대학이란 기관의 성격상 금기가 되고 있는 것이 세계의 공식적인 200여 대학평가기구의 공통적 입장이다. 충동적 보도를 위한 국내·외 언론이나 입시 업체들의 각종 보도나 자료들은 공인된 것이 아니고 신뢰성이 떨어지며 서열화로 인한 폐단 때문에 대학

사회에서 계속 지탄을 받고 있음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이는 마치 다양한 능력과 소질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고체계가 서로 다른 우리 인간을 특정기능만이 아닌 종합적 인간서열을 매겨 보려는 모순이나 무모함에 비유할 수 있다. 대학이란 그 성격상 복합적 인격체이고 규모와 역사 그리고 특성이 다르므로 서열화나 계서화가 불가능한 것임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서열화를 위한 각 기관의 요청이나 주장 때문에 평가기관에서는 곤욕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강한 계서주의의 풍토 속에서 이는 자칫 평가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해독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6) 평가결과가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문제
 끝으로 대학평가는 그 자체로 가치있는 사업이며 새로운 혜택이나 재정지원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평가결과는 판정을 받아 각종 보고서와 함께 사회에 공개되고 필요한 부분은 교육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평가대학에는 그 대학의 강점이나 약점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권고나 제안을 담아 평가결과 보고서로 환류되어야 한다. 또 평가내용이나 결과는 해당 대학에 대한 행정지도나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크게는 대학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결과를 점수화·서열화하여 이를 바로 대학 지원의 혜택을 위한 기준으로 삼거나 우수한 대학만 지원하는 등의 차원 낮은 활용은 오히려 대학평가의 본질적 의의나 성과를 왜곡한다. 그 위에 대학사회의 협동이나 자율 통제에 의한 건전한 상호 발전 의욕을 희석시킬 수 있는 폐단이나 역기능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할 것임을 밝혀둔다.

4. 끝맺으면서

대학에 대한 평가체제는 이제 미국적 한계성을 넘어 거의 모든 나라에 보편화된 공통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대학평가체제는 대학수나 고등교육 인구(동 연령 인구의 54.6%, 『한국교육지표』)가 비교우위면서도 아직 질적으로는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로 인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학교육도 세계적인 보편성과 함께 그 나라 그 사회의 입장이나 특수성을 외면할 수 없듯이 대학평가 역시 우리나라 풍토와 체질에 걸맞은 바람직한 제도로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와 토론은 물론 평가기법이나 평가결과의 유용성에 관한 심도있는 검증이나 대안의 탐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성숙한 사회가 추구하는 현대적 가치체계로서는 균형과 조화 또는 견제와 균형 그리고 경쟁과 협조와 같은 명제들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빈부의 격차나 과소비 풍조, 그리고 계층 의식이 심한 사회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어야 할 시대적 이념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의 실체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사회는 물론 대학사회에서까지 대학평가를 대학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하거나 그 수단적 과정으로 오해하는 데 문제가 있다. 경쟁이란 의욕을 자극하고 발전을 위한 성

취동기를 유발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개체나 기관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반목을 조성하여 끝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기능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쟁을 강조할 때는 언제나 협력이나 상부상조도 함께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상호의존적인 현대사회의 윤리적 규범이며 미덕이 되어야 한다. 특히 개인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공동체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진단되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교육현상이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경쟁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상호협조가 매몰된 지나친 경쟁의 강조는 엄청난 폐단을 수반한다. 또 절대평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학평가는 결코 다른 대학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경쟁이며 자기가 설정한 수준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고, 주기적인 건강진단이다. 그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목적, 장기발전계획의 달성도 측정, 독자성이나 특성의 수준 확인 및 구성원들의 만족도 점검, 그리고 사회적 신뢰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 등에 대한 대내·외적인 확인과 점검에 다름 아니다. 전국의 총장들이 합의한 연도별 발전계획의 달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대학이나 학과의 강·약점을 들추어내어 미래발전이나 자기개신의 처방을 마련하는 주체적 노력인 것이다. 따라서 수준높은 대학보다는 아직 교육여건이 미흡한 대학을 더 지원하여 대학사회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경쟁과 협조라는 시대적 이념을 추구해야 된다는 역설적 주장도 성립되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대학에 가고 정부의 재정은 온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견지에서 평가결과의 활용이나 대학

재정지원의 기준 및 척도 등은 보다 심도있게 접근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대학평가는 정부의 지나친 관여나 사회적 여론에 상관없이 대학사회의 발전의 지가 농축되고 각 대학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의 광범한 의견이나 여론을 경청하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대학사회 공동의 시대적 과제다. 어느 누구도 추진 방안이나 평가기준 및 그 과정 설정에 독단이나 아집이 있을 수 없다. 평가 계획의 수립은 물론 평가기준의 개발 및 확정, 평가시기와 방법, 평가단의 구성과 아울러 평가결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대학발전을 위한 대학인에 의한 대학들의 협력작업이고 공동사업이다. 대교협 사무처는 그 뒷바라지와 심부름을 할 뿐이다. 대학마다 좋은 의미에서의 상당한 긴장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대학평가체제가

초기의 시행착오적 과정을 거울삼아 순기능을 더욱 살리고 역기능을 배제해가야 한다. 각 대학의 명예와 의지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존중하면서 어떤 부작용이나 폐단도 불식하고, 국제적으로는 세계평가기관협의회(INQAAHE)와의 연계체제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 발전을 더욱 촉진하는 바람직한 기제로 발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끝을 맺는다. ■

구병림/연세대학교 교육학 석사. 건국대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 교환교수, 대교협 전문위원 및 고등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대교협 사무총장으로 재직중이다.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과제", "대학교육의 변화추세와 학생소비자 시대를 위한 대비"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